

韓國大學의 개혁과 進步學問의 역할

吳 世 澈
(延世大 經營學科)

요즈음 언론은 마치 개혁이라는 낱말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양 김영삼정권의 출범을 개혁시대로 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김영삼정권이 노태우정권과 질적으로 다른 權力構造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파쇼권력이 부르주아권력으로 대체될 만한 토대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아니면 민간인끼리의 선거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파쇼권력과는 다른 정권이 탄생했는지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김영삼정권이 根本的 改革을 해낼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마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기최면에 걸려 근본변혁의 과제를 방기해서도 안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노태우정권에 대한 심판의 마당이 되지 않고 보수정치꾼들간의 뽑기경쟁으로 마감된 것은, 분명히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保守와 進步의 대립이 시작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민주와 진보의 이념과 주체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보수야당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메스꺼운 자각도 이루어졌다. 나아가 제도정치가 보수세력들의 각축장으로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세력에게 근본적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결론도 도출되고 있다.

大學의 改革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근본적 개혁인지, 부분적 개선인지 구분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의 자율화·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개혁은 얼마나 되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자.

첫째는 대학의 올바른 主體 확립과정으로서의 대학개혁이었다. 교수조직으로서의 교수평의회나 교수협의회 건설, 학생의 부분적 학사참여, 직원노조의 결성 등이 표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주체로서의 교수·학생·강사, 행정주체로서의 교직원들이 실질적인 대학의 주인으로, 대학권력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교육법의 기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립학교법을 악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신분은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대학의 최고권력기구로서의 대학평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수평의회도 보수화된 교수들의 사교클럽으로 변질되고 있다. 직원노조와 강사노조가 결성되었으나, 권력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둘째는 敎育內容의 개혁이었다. 소위 주제중심, 문제중심의 교과과정을 대폭 늘리고 몇 가지 영역

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진보적 교수를 채용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몇몇 대학에 한정되었다. 오히려 잠시 인기를 누리던 진보적 교과목은 비인기과목이 되었고 그나마 진보적 교수의 채용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保守化의 물결이 대학사회 구성구석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사회개혁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대학에 기대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대학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享樂文化를 강화시키는 역할과, 기득권을 가지고 보수세력의 體制維持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혁의 시대에 개혁의 담지자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은 오히려 체제유지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대학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그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함으로써 대학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역사진보의 주체를 양성하는 고급사회화기관이다. 역사진보의 주체는 기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즉자적으로 계급적 조건이 계급의식으로 전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진보의 주체는 끊임없이 교육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보수세력의 安定化를 향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진보세력과 타협하거나 민중세력에 대하여 선별적 탄압을 하게 된다. 진보세력은 진보적 이념을 앞세워 그 세력을 결집하고 보수세력과 대결한다. 이 대결의 마당이 공평한 경기규칙에 의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 없는 투쟁이 요구된다. 바로 진보의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는 앞으로의 젊은 세대이며 노동자 계급이다. 이들이 역사진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한 체제와 내용은 필연적인 역사의 요구이다.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현단계 우리 大學의 根本的 改革方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학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思想의 자유와 思想 選擇의 자유이다. 우리 대학의 학문체제는 보수적인 체제가 골간을 이루면서 일부 자유주의적 학문이 보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구조 속에서 교수와 학생은 재생산되고 젊은 세대 속에 지배이데올로기가 침투된다. 지식은 권력의 도구이며, 보수체제유지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체제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균형을 반영하는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대학은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 통로일 수밖에 없다.

역사진보의 주체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學問 體系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敎科課程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에는 특정주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 서로 대립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討論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보적 사상과 이론을 가진 교수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보수적 학문체제에 편중된 採用構造를 바꾸어야 한다. 학생들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를 토론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실천적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도 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思想과 學問의 自由가 만끽될 수 있는 마당은 대학만이 마련해 줄 수 있다. 학문은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진보의 실천과도 떨어질 수 없다. 이제 우리의 학문세계와 대학은 역사적 분기점 위에 서 있다. 파쇼권력이 순수한 보수권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진보적 사상과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평한 원칙 위에서 서로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은 삶의 구성구석에서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思想의 自由, 進歩學問의 과감한 도입이야말로 대학이 사는 길이요, 학문이 사는 길이요, 나라와 역사가 사는 길이다. ■